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기후위기 대응

-녹색뉴딜 또는 에너지 전환

서영표(제주대)

희망은 진보를 위한 연료이고, 두려움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Hope is the fuel of progress, fear is the prison in which you put yourself.

토니 벤 (Tony Benn)

1. 머리말

2019년 ‘멸종 저항’ (Extinction&Rebellion)으로 드러난 청(소)년 세대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하다. 과학과 지식의 상품화로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객관적 데이터가 말해주는 경고 또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더이상 대응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이 과학계 안에서 팽배하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2019년 여름에 출간된 책 *On Fire: The (Burning) Case of a Green New Deal*에서 기후변화 위기의 원인이자 위기대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IPPC가 제시하고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섭씨1.5도 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목표달성은 자본주의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안 앵거스(Ian Angus)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앵거스는 인류세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계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클라인은 이런 조건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2014년에 출판된 전작 *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2008-9년 위기가 가져다준 기회를 ‘날려버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¹⁾

클라인이 제기하는 또 다른 논점은 기후위기는 복합적인 사회, 정치, 경제위기와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혁명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97년 교토의정서가 어떻게 유명무실해졌는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자본이 제시하는 지구공학과 기술적 돌파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축적 영역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도 잘 알고 있다. 사회, 정치, 경제의 혁명적 변화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화하면 탈탄소화(즉 탄소제로) 사회는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변화과정이 에너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체계의 적절한 믹스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용량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체계의 전환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용량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에너지 소비수준을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현장에서 소실되는 열과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택설계와 도시계획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 자가용 사용을 축

1) Ian Angus, *Facing the Anthropocene: Fossil Capitalism the Crisis of the Earth System*, Monthly Review Press, 2016, Naomi Klein, *On Fire: The (Burning) Case of a Green New Deal*, Simon & Schuster, 2019, Naomi Klein,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 Simon & Schuster, 2015.

진하는 교통체계가 불러오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 소비, 유통 전반에 걸친 변화는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체계 안에 살고 있는 행위자들, 곧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은 노동패턴, 일자리유형, 이동과 거주 방식 모두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는 ‘거대한 전환’이기 때문이다. 체계 수준에서의 제도적 변화는 일상의 행위와 가치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역으로 변화된 행위와 가치는 사람들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정치행위에 참여하도록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거대한 장벽: 시장과 국가, 그리고 경제학적 논리와 대의민주주의

이 절에서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로 나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두 개의 장벽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경제학적 논리’와 협소하게 정의된 ‘대의민주주의’의 낡은 틀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장벽은 제도적(물질성을 갖는다는 점에서)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이다. 이기적 개인들의 사적 이익추구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경제학적 논리는 사람들의 필요(needs) 충족과 삶의 질,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는 이윤동기에 의해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몰아붙인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경제학적 논리에 기대어 이익을 독점하는 집단들은 절대다수의 필요가 표현되고 주장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형식적인 ‘대의’로 정치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대의민주주의를 벗어나는 정치적 행위는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자기 검열되고 경제학적 논리를 넘어 필요충족에 호소하는 행위는 시장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으로 공격받는다. 따라서 경제학적 논리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틀 지워진 질서는 단순한 장치들(apparatuses)에 멈추지 않고 그 장치들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퍼트린다. ‘옳은 것’과 ‘그른 것’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가르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기준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자기검열하고 규제하게 한다.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²⁾

하지만 지배적인 질서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하지는 못한다. (경제학적 논리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되는) 시장과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되는) 국가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다. 경제학적 논리와 대의민주주의는 모두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어서 그것들과 실제 사이에 언제나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시장과 국가가 세워 놓은 원칙에 맞추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 산발적이고 고립적이며, 그래서 단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국가 바깥의 삶의 실험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은 시장과 국가가 지배하는 생산, 소비, 유통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지금까지의 시장과 국가의 힘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다른 삶의 양식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을 절대적인 선으로 격상시키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제1번 원리인 다원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그 다

2)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가르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서영표, “당연한 것을 낮설게 하는 실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진보평론』 60호, 2014, 40-41쪽을 보라.

원성이 완전히 발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던, 하지만 시장맹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당해 왔던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빙산의 일각 아래 위치한 거대한 ‘다른 삶’의 양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³⁾

1) 경제학적 논리라는 장벽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것은 ‘경제’의 의미 또는 ‘경제’의 원리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제학적 논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기획재정부가 설정하고 경제학의 ‘관념적’ 지식으로 무장한(스스로는 완벽에 가까운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제 관료들과 학자들에게 의해 재생산되는 정책결정을 통해서다. 이러한 ‘허구적’ 관념에는 ‘인간’과 ‘자연’이 빠져 있다. ‘사회’(실재)로부터 분리된 경제학은 이기적 원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극대화된 효용, 그리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경쟁과 그러한 경쟁이 촉진하는 기술적 진보를 측정하는 도구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구들로 측정된 데이터의 해석을 실재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바꿔치기 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제학적 논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해양부가 인간과 자연을 훼손하면서 숫자로만 표현된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정책결정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인간의 가치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되는 협소한 경제학적 원리이며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수단화하고 착취하는 개발(development)이다. 다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존하기 어려운 시장주의적 일원론(monism)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⁴⁾

경제학적 논리의 관념적(허구적) 기초는 삼중적이다. 첫째, 자본주의적 상품·화폐관계가 초역사적이라고 가정한다. 둘째, 인간본성은 이기적, 계산적, 원자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의 조건인 자연은 무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이 마지막 가정은 외부성(externalities)이라는 이름을 달고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한다. 자연은 오직 가격이 부여될 때에만 합리적 계산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연의 한계를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개념에 의존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환경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이 제시한 길이기도 하다.⁵⁾

세 가지 허구적 가정 위에 두 가지의 원리가 도출된다. 첫째, 개인 행위자는 ‘언제나’ 주관적으로 정의된 효용을 최적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시장과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들의 합으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둘째, 고립된 원자로서의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은 시장을 통해 최적화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신호에 따른 행위는 균형을 이룬다는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이론이 따라 나온다. 시장경제

3)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많은 비시장적 영역의 실험이 시장주의적 태도에 입각한(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해 다원성을 상실하는 현재의 모습은 매우 역설적이다. 자본주의 체계 아래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관계들에 대해서는 J-K 김슨 그레이엄,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2013을 보라.

4) 시장 일원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John O'Neill, *The Market : Ethics, Knowledge and Politics*, Routledge, 1998을 보라.

5) 환경경제학과 관련된 논의는 John O'Neill, *Markets, Deliberation and Environment*, Routledge, 2007과 John O'Neil et al. ed, *Environmental Values*, Routledge, 2008을 보라.

에서 균형이 깨지는 것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일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위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이론적으로’ 부정된다. 경제학은 현실을 설명하려하지 않고 현실을 스스로가 제시한 이론에 맞추어 왜곡하여 ‘구성한다.’

하지만 경제학적 논리의 자율적 인간은 그 토대가 허구적이기 때문에 관념적 구성물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은 시·공간적, 역사적으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주는 구조적 효과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자율이 구조의 효과(구조의 효과는 이미 고립된 원자로서의 행위자를 부정한다)를 전제로 한 행위자의 해석과 개입, 그리고 실천이라면 경제학적 논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경제학적 논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과 착취를 부정하거나 은폐한다. 부정과 은폐의 궁극적 목표는 현실의 정당화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기댄다면 노동가치론에서 도출되는 잉여가치법칙을 볼 수 없게 한다. 경제학적 논리를 구현하고 있는 신고전파경제학의 눈에는 오직 가격과 이윤만이 보일 뿐이고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 요소(factor)를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인으로만 존재한다. 오직 가격으로 표현된 효용함수와 생산함수만이 있을 뿐이다.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과정에 내재한 계급적 적대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다.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대립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태도를 계급투쟁 말고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⁶⁾ 포스트모던 이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계급투쟁이 노골화된 신자유주의의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의 선택’과 정체성을 말하면서 ‘계급’을 지난 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⁷⁾

둘째, 균형과 최적의 허구적 가정은 체계의 모순과 그 모순이 발현되는 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 위기는 고작해야 균형을 찾아가는 적응기로만 인식될 뿐이다. 2008년 이후 지속되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이미 예정된’ 경제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누적된 모순을 예기치 못한 외생적 변수 탓으로 돌리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는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단히 낮은 사회적 조건에 진입하고 있기에 이러한 낮은 인식으로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모순과 위기의 부정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설명할 수 없기에 제대로 된 문제해결 방향 모색을 방해한다. 위기와 모순을 부정하기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최소한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봉쇄한다. 주류경제학의 경제학적 논리가 알고 있는 변화는 다윈 진화론의 ‘왜곡된’ 해석에 근거한 점진적 ‘적응’(adaptation)일 뿐이다. 위기는 순간적인 불균형이고 사회는 (경제학적 논리에 따르면 고립된 원자들의 선택들의 결과로서만 존재하지 때문에 ‘사회’는 주류경제학에서 적절한 이론적 위치를 갖지 못하지만) 그러한 불균형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진화할 뿐이다. 사실 이러한 설명은 진화론을 제시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왜곡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우발적인 비약(contingent leaping)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발성과 비약이 진화의 핵심이다. 특정한 역사적 단계의 사회적 형

6) 이러한 비판을 담고 있는 책은 많다. 예를 들어 벤 파인과 알프레드 사드-필호, 『마르크스의 자본론』 책갈피, 2006을 보라.

7) 시대착오적인 ‘탈계급’ 정치 노선에 대한 비판은 서영표, “인식되지 않은 조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골적인 계급사회의 탈계급 정치”, 『진보평론』 58호, 2013, 62-63쪽을 보라.

태의 기원 자체가 우발적이며, 발전과정 또한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들에 의해 과잉결정(over-determined)된다. 따라서 기원과 발전과정 자체가 우발적이다. 결과적으로 모순이 해결되는 방향, 미래의 발전 방향도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 아래 있기에 비결정적(undetermined)이라는 점에서 우발적이다. 인류의 역사는 정해진 조건 속에서 거기에 맞춰 행위하며 적응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과 얽혀 있는 집합적 행동들 사이의 투쟁의 효과로 만들어져 왔다.⁸⁾ 이것이 다윈이 말하고 싶었던 적응일지도 모른다. 생존을 위한 비약을 가리키는 자연의 경고, 그리고 이미 공진화(co-evolution)의 과정을 통해 이것과 뗄 수 없게 된 인간사회의 위기를 협소하고 오만한 근대적 과학으로 부정하는 현재의 인류는 스스로의 알파한 지식이 허용한 ‘적응적 향상’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태를 인식함으로써 공멸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⁹⁾

셋째, 경제학적 논리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존재, 사회적 유대가 필요한 존재,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존재, 실존적으로 자궁심이 필요한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경쟁기계로 환원하기 때문에 기본적 필요(basic needs), 인간적 필요(human needs), 사회적 필요(social needs)를 인식할 수도, 정의할 수도, 이론화할 수도 없다. 경제학에서 인간본성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역량(capacities)의 역사적 발전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¹⁰⁾ ‘지성의 개선’과 ‘의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이미 인간의 지성은 최고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치와 정책 결정은 엘리트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경제학적 논리 앞에 근대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한 이상으로 항상 유예된다. 이런 논리는 고전과정제학 최후의 이론가이자 공리주의였던, 그래서 절충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발전적 민주주의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퇴행을 초래한다.¹¹⁾ 대중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는 밀의 생각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경제학적 논리는 인간을 우승열패의 정글 속에 영원히 유폐하려 한다. 이런

8) 다윈과 같은 시기에 진화론을 발전시킨 알프레드 윌리스는 사회주의자였다. 다윈 이전의 사회진화론을 제시한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사회이론은 다윈의 그것과 같지 않다. 다윈주의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는 Peter Dickens, *Social Darwinism*, Open University Press, 2000 참고하고, 윌리스의 사상에 대해서는 Ted Benton, *Alfred Russel Wallace, Explorer, Evolutionist, Public Intellectual: A Thinker for Our Own Time?*, Sir i Scientific Press, 2013을 보라.

9)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 논쟁과 맥이 닿아 있다. 탈정상과학은 우발성을 강조하면서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으로 나간다. S. O. Funtowicz, J. Martinez-Alier, G. Munda and J. R. Ravetz, *Information Tools for Environmental Policy under Conditions of Complexity*.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Environmental Issues Series No. 9, 1999를 보라.

10) 필요충족과 인간의 역사적 역량에 대한 논의는 서영표,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연구』 9(4), 2012를 보라. 특히 83-92쪽. 필요충족을 경제발전의 토대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Felix Rauschmayer, Ines Omann and Johannes Frühmann, *Sustainable Development: Capabilities, Needs, and Well-being*, Routledge, 2011에 실린 논문들을 참고하라.

11) 이러한 근대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Etienne Balibar, *Citizenship, polity*, 2015를 보라.

의미에서 경제학적 논리는 민주주의와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불행한 결혼(unhappy marriage)인 것이다.

넷째,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경쟁기계로 고정시키는 것의 당연한 결과는 자연적 한계와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연속성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물론 자연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토마스 맬서스처럼 절대적인 자연의 한계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사회의 변화 가능성, 구조적 조건에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얻어질 인간역량의 성장을 알지 못한다. 맬서스는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 자연의 한계 안에서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인간역량의 발전에는 넘지 못할 한계가 있다는 존재론적인 자연주의에서 멈추지 않고 존재하는 사회질서를 옹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인식적 보수주의를 주장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비인간-동물종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연속성), 인간만의 독특한 역량, 즉 역사적으로 자연생태계 안의 인간적 삶의 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인간의 새로운 역사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¹²⁾

다섯째, 신고전과경제학은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학비판도 ‘생산적’ 노동을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돌봄과 가사노동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격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신고전과경제학의 ‘무지막지한’ 환원론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적 경제학비판이 사회적 재생산노동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을 가르는 기준은 노동가치론이 지배하는, 즉 착취법칙이 관철되는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일 뿐이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와 메리 멜러(Mary Mellor) 등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이러한 입장과 공명한다.¹³⁾

주류경제학의 협소한 이론적 토대를 비판하면서 현재의 지배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운동은 곧 인간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우리 시대 역사적으로 요청되는 인간의 역량은 자본주의 아래 정의된 ‘생산적인’ 것의 기준을 변화시켜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충족에 맞추어져야 한다.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체계를 보다 효율이 높은 체계로 이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적은 체계는 곧 끝없는 경쟁, 경쟁의 결과인 확대재생산, 확대재생산의 수단인 이윤추구가 불러오는 낭비가 종식되는 필요충족을 토대로 한 재생산중심의 경제를 의미한다.¹⁴⁾

이러한 사회로의 이행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노동패턴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노동과 여가의 시간배분이 달라질 것이며, 일자리의 종류도 변화될 것이다. 경제학적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

12) 생태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제기된 맬서스의 평가에 대해서는 Ted Benton, “Marxism and Natural Limits: An Ecological Critique and Reconstruction“, *New Left Review*, 178, 1989를 보라.

13) 낸시 프레이저 외, 『99% 페미니즘 선언』, 움직씨, 2020, Mary Mellor, *Feminism and Ecology*, Polity Press, 1997을 참고하라.

14) 생태경제학의 입장에서 제시된 대안적인 사회원리에 대해서는 B. Özkaynak, P. Devine and F. Adman. 2012. "The Identity of Ecological Economics: Retrospects and Prospect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6을 보라.

ligence, AI)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라질 일자리에 대해서만 걱정할 뿐, 그러한 기술적 진보를 이용한 삶의 방식과 노동패턴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는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능한 것’ 과 ‘불가능한 것’ , ‘옳은 것’ 과 ‘그른 것’ 의 이데올로기적 자기검열만 넘어서면 충분히 도달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야만 하는 목적지임에도 말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한계는 현실의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적 논리가 왜 삶과 유리되어 실재와는 무관한 ‘논리를 위한 논리’ , ‘이론을 위한 이론’ 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논리를 위한 논리’ 와 ‘이론을 위한 이론’ 이 단순히 관념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데, 실재를 왜곡하여 표상하는 경제학적 논리는 궁극적으로 실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은폐하고 그럼으로써 지배집단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2)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했던 대의정치제도의 효과는 ‘무(無)’ 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수동적’ 정치행위자인 유권자로 남아 있도록 하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치행위를 가로막는, 정치적 기제와 그것에 동반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당들 사이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거의 소멸하고 우경화된 위치에서 수렴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한동안 상대적으로 정치적 통제 아래 있었던 자본의 힘은 자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를 노골적으로 좌지우지하게 되었다.¹⁵⁾ 주류경제학이 사회과학을 집어삼켜 식민화하는 것과 나란히 정치와 사회, 문화는 온통 경제적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보험’ 으로 대비되어야 하며 주택, 자동차에서 휴대전화까지 모든 상품은 금융적 투자의 대상이거나 할부라는 이름의 부채와 관련된다. 장례문화마저도 금융상품이 되어버렸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불충분한 소득이 소비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신용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부채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엘리트는 거대자본(특히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정치가 자본의 힘에 지배되고 최소한의 ‘대의’ 조차도 막아 버리는 퇴행이 생겨나는 데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운동도 한몫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운동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근대적 한계(개발주의와 전문가(엘리트)주의)와 후기 근대적 모순(소비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여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연줄망과 권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전근대적 잔재의 부정적 혼종(negative hybridity)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편승했다.¹⁶⁾ 정당정치가 우경화된 시장주의에 수렴되는 것은 계급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노골화되는 것의 이면이었지만 진보세력과 시민사회운동은 ‘계급’ 정치를 포기하고 시장맹신주의를 포스트모던 정체성의 정치로 정당화했다.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지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운동은

15)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 평가는 Young-Pyo Seo, “Reading Korean society through Stuart Hall’s cultural theory: constructing a new paradigm for socialist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Inter-Asia Cultural Studies* 18(2), 2017을 참고하라.

16) 전근대적, 근대적, 후기 근대적 모순의 착종에 대해서는 서영표, “제주에서 사회학하기-사회학의 존재이유 되찾기“, 『탐라문화』 54호, 2017, 94-96쪽을 보라.

자신들이 열망하는 사회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 제도적 현실을 수용한다. 이념적으로는 급진적이지만 실제의 정치적 행위는 보잘 것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이념적 급진성도 약해진다. 기득권 세력이 권력의 자기장 안의 귀퉁이에 허용한 ‘달콤한’ 역할에 중독되어 버린다.¹⁷⁾

이러한 경향은 종종 지역정치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진보세력과 시민사회운동도 지역공동체의 연줄망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진보’는 현재의 상태가 가지는 결함을 비판하고 그것의 대안을 모색하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넓은 정치, 시민의 정치를 기획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는 ‘비효율’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역의 개발동맹의 이익독점이 드러나는 개별적 정치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캠페인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효율적’인 선택이다. 선택과 집중은 비판과 대안이 없는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개별 사안마다에서 보여주는 전투성은 ‘운동 산업’(movement industry)의 효과적인 수단이다.¹⁸⁾ 개별 사안이 어떤 경제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모순이 무엇인지,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복잡한 비판적 분석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두텁고 다층적이며, 때로는 분열적이기까지 않는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분석하고 정치화하는 작업도 불필요하다. 결국 진보세력과 시민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에 편승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게 정의된 넓은 정치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 정도의 역할은 기득권세력에게도 필요하다. 협소한 정치의 제한된 민주주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는 정당화의 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모순을 ‘외면’하고 계급정치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주기적인 선거정치에 붙들리게 된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거정치는 마케팅과 광고로 전략했다. 탈정치화(depoliticisation) 또는 탈정치(post-political)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혹자는 탈민주적(post-democracy)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치는 민의를 대변하기 보다는 돈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전략해 버렸다. 그래서 진실 또는 진심은 중요하지 않다. 진정성(authenticity)은 사라지고 탈진실(post-truth)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데 ‘탈진실적 탈정치’는 정치가 정치인 개인으로 더욱 협소해지는 효과를 가진다. 현실에 대한 한탄과 비난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짜증 나지만 피할 수 없는, 또는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불만은 구조와 제도가 아닌 개인으로 향한다. 탈민주적, 탈진실적 탈정치 시대에 어울리는 소비주의적 정치를 목격하게 된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는 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대안적 선택은 다른 상품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민주주의의 실체다. 그런데 정치적 주체로서의 ‘국민’이 행사하는 정치적 권리란 이런 상품교체 요구와 다르지 않다. 노무현을 이명박으로, 이명박을 박근혜로, 그리고 박근혜를 문재인으로. 광장의 촛불이 표현한 ‘다른 사회에 대한 열망’은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에서 끝나 버렸다. 대단히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지배적 정당들 사이의 과잉된 싸움에 현혹되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조국’을 수호하는 것을 대단한 정치행위인 것처럼 오인하기도 한다. 결국 거리와 광장에 결

17) 서영표, “인식되지 않은 조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골적인 계급사회의 탈계급 정치”, 『진보평론』 58호, 2013을 보라.

18) 체계에 대한 비판이 부족한 사회운동이론에 대한 비판은 서영표, “사회운동이론 다시 생각하기: 유물론적 분석과 지식구성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13(2), 2013을 참고하라.

집된 에너지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¹⁹⁾

다양한 쟁점과 현안이 제기되고 대중의 불만이 쌓이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는 이러한 쟁점과 현안, 불만을 잠재우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로 수렴되면서 정치를 텅 빈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정치정당 사이의 이념적, 또는 정책적 대결이 약화되고 모든 정치세력이 시장 친화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경향에 갈수록 강력해지는 미디어의 힘이 더해지면서 선거정치는 마케팅으로 전락한다. 현실의 갈등을 정치의 장에서 해결한다는 정당정치 의미는 거의 실종되어버렸다.

혹자는 한국정치는 예외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특징지어지며, 따라서 선거정치에서의 이념대결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제는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대별되는 한국정치의 진보-보수의 대결은 허구다. 분단과 냉전효과는 서로를 좌파와 보수로 불러주고 건널 수 없는 이념적 차이를 부각시키지만 한편은 그냥 시장 친화적인 무너뿐인 ‘자유주의자’ 들이고 다른 한편은 기득권과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념을 활용하는 ‘우익 기회주의자들’과 ‘극우파’의 결합일 뿐이다. 그럼에도 서로를 사회개혁과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로, 그리고 민족적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보수’로 불러줌으로써 허구적인 정치적 위치를 확정하고 다양한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무력하고 시키고 있다.

3)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후변화와 생태적 위기의 양상은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간대가 논의될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학적 논리에 쫓겨 있다. 경제학적 논리로 무장한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투자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하는, 이미 투자된 시설은 그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마모시켜야 하는 자본가들은 이러한 안일한 태도의 든든한 뒷배다. 입으로는 기후위기와 녹색전환을 말하면서도 관료적 장막 뒤에 숨어 자본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한 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할 것조차 없어 보인다. 일상에서 체험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파괴적 양상은 제도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분명 대중은 위기를 보다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통치성을 내면화한 대중은 허용된 제도정치 과정을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되돌아올 직접 행동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도 않다.

시민운동이 이러한 교착상태를 돌파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오랫동안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진보’ 인척 하는 ‘시장자유주의’ 세력과의 거래에 익숙해져 왔다. 보수적 정당 안에서 분과를 형성하고 압력의 정치를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세력이 되었을 때는 이미 처음에 가졌던 ‘비판의 심성’은 사라지고 없었다. ‘현실적’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주의의 몰락이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의 종말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은 계급착취는 애써 보려하지 않았다. ‘시장의 승리’라는 이데올

19) 불만과 저항이 선거정치로 수렴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서영표, “변화를 향한 열망, 하지만 여전히 규율되고 있는 의식: 2016년 촛불시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마크스주의연구』 14(1), 2017을 보라.

로기적 공세에 투항하면서 그 시장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았다. 성찰은커녕 이미 받아들인 지배적인 세계관은 시장의 파괴적 효과라는 경험적 사실조차 부정하게 했다. ‘현실적’이라는 수식어는 고작해야 협소한 경험주의적(empiricist) 태도로 실재를 평면화해서 이해하는 이론적 후퇴를 정당화하는 핑계거리였던 것이다.

시장을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기후위기를 기술적으로 돌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녹색전환을 말하면서 그 내용을 기술적 조정(technical fix)으로 채워 넣는 것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새로운 자본의 축적영역과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기울게 된다. 녹색전환 또는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시장-성장-기술은 아주 노골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한다. 탈탄소화와 화석연료사용/온실가스배출이라는 모순적인 두 개의 길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저감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ologies, NETs)과 탄소포집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지구공학(geo-engineering)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탄소저감기술은 대기직접포집(Direct Air Capture, DAC)과 탄소포집·저장을 통한 바이오에너지(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BECCS)가 대표적이다. 대기직접포집은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매립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탄소포집저장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성장하는데 탄소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작물을 에너지로 사용할 때는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구공학적 접근은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분사하거나 바다에 소금물 구름을 분사하거나, 대기권에 거대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지구공학적 접근은 탄소저감기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대기와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공학적 접근은 기후를 조작하는 기술인데 이것 자체가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가 동반된다. 무기로 사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녹색전환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체계의 변화를 저지하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과학은 복잡성과 우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곧 불확실성(uncertainty)이 과학의 극복대상이 아니라 과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복잡한 체계에서 일부를 잘라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기술적 처방을 내리는 것은 근대적인 협소한 과학주의적 태도 안에서는 확실성으로 파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과학패러다임 안에서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자연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경작 가능한 토지를 파괴하며, 따라서 식량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합리적 선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3. 전환의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기후변화와 생태적 위기가 파괴 직전에 다다라 있지만 성장에 중독된 생산, 유통, 소비의 방식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이윤과 개발에 눈이 멀어 있다. 정치는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가짜뉴스와 포퓰리즘 선동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판단이 좌절과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비관적인 현실 판단은 행동과 실천을 촉발하는 계기여야 한다. 우리는 ‘낙관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1) 녹색전환과 일자리-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재생산

녹색전환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는 완전히 탈탄소화 한 전력생산이다. 하지만 전력생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전력산업에만 국한된 대안은 불가능하다. 스웨덴과 프랑스가 원자력에 기대어 저탄소 전력부문을 달성했지만, 이들 국가들의 소비배출은 그대로다. 따라서 전력과 에너지를 넘어 건축, 산업, 교통까지 탈탄소화 할 수 있는 계획 필요하다.

녹색전환은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달성에서 노동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탈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녹색뉴딜은 사회전반에 걸친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충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개입이 계획되어야 한다.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주체가 노동자들이라면 이러한 공적 계획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녹색전환에 앞서 이미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빈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탈탄소화 과정이 시장을 통해 추진된다면 노동자들이 겪게 될 고통은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화석연료 추출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색뉴딜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정의(justice)의 문제와도 대결해야 한다. 녹색전환은 탈자본주의적, 탈시장적 전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에너지 전환은 공정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탄소 경제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확장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환은 재교육과 재고용을 통해 현재의 숙련기술을 녹색에너지 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일 수 있다. 에너지체계의 재편, 건물개량, 엄청나게 확대될 녹색 교통, 지속가능한 농업부문 모두 탈산업화와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의해 황폐화된 지역들을 되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는 노동패턴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환의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녹색전환이 더 좋은 일자리와 더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은 전환이 위기관리와 대응에 멈추지 않고 경제의 새로운 모델 추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활성화는 당연한 전제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것은 기술진보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현재의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의 확대라는 노동패턴의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녹색전환이 사회 전체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적 분업(sexual division of labour)에 따라 여성, 가족, 지역공동체의 무상노동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

n)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통로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 분야의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수적이지만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외부에 위치한 사회적 재생산노동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현행의 경제체계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녹색전환과 소유형태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는 화석연료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당연히 분산된 민주적 소유형태가 실험될 수 있는 토대가 주어진다. 스마트그리드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여유전력이 판매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열을 포집해서 난방에 사용할 수 있고, 공공건물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은 연료 빈곤을 줄이고, 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송전과 배전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녹색일job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된 에너지체계는 지역사회의 결정과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지역의 결정과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연료 빈곤을 종식시키고 탄소 없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계획일 수밖에 없다. 전국적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적으로 분산된 재생에너지가 공동자원(common)의 성격을 부여받는다면 전국적인 에너지 전략이 포괄하는 에너지믹스와 공급망은 에너지를 공공재(public goods)로 정의한다. 공동자원의 분산성과 공공재의 계획은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공존 가능하다. 공동자원과 공공재는 시장에 힘에 대항하는 두 가지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구조와 경제운영원리는 공적소유(public ownership)와 지역공동체 소유(local community ownership)라는 새롭고 대안적인 형태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리는 시장이 제시하는 일원론적인(monist) 접근에 저항하여 다원주의(pluralism)를 실현하는 것이다. 시장맹신주의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지만 자유주의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다원주의가 시장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시장맹신주의를 넘어선 녹색전환은 시장에 대항하는 다양한 소유형태가 번성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소유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순수한 지역공동체 소유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방행정단위의 계획과 개입 아래 공적 소유와 시장의 사적 소유형태와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수준 행정단위의 경제활동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필요충족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조직화될 다양한 선택지들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재편은 ‘무’에서 출발할 수 없다.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 결사, 조직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행정단위, 노동조합, 지역 기업, 다양한 결사들, 시민단체들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서도 공적 계획과 개입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정부는 구매력을 활용해 재화와 용역의 주문과 조달을 통해 지역 순환경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과 토의가 가능해야 한다. 실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적 소유, 공동체 소유와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적 소유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은 정부의 공적 개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노동자들의 기업경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에 의한 공적 소유도 지방행정단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지방행정단위의 공적 소유형태는 시장을 사회적 통제 아래 두고 지역공동체 소유를 보호하면서 보편적인 기본필요충족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기본필요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는 녹색전환에서 핵심적이다.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기후변화의 위기와 함께 실패한 경제체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생존 자체가 문제일 때 기후변화는 일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문제로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녹색전환은 탈탄소화에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향한 계획이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확장은 공적 부문 확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윤동기와 상반되는 필요충족의 원리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 인권에 호소한다. 교육, 보건과 사회적 돌봄, 에너지, 물, 주택, 교통, 정보통신기술, 식량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 소유는 국가소유형태를 의미한다. 녹색전환이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서비스와 재화의 국가적 소유가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국가소유형태는 매우 관료적이어서 대중의 필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맹신주의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와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 모두에서 국가의 개입이 모두 비민주적인 관료주의로 전락했다는 역사적 조건에 기인했다. 그렇다면 녹색전환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은 과거의 관료주의와 달라야 한다.

우선 국가소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에너지와 물, 철도처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불가피한 분야는 국가소유형태 아래 있어야 한다. 생산과 공급에서 전국적인 망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연독점 부문은 기본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접근과 제공 모두에서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사적 소유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처럼) 핵심적 정책 목표 설정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입에 필수적인 분야도 국가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윤동기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인 기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시장의 힘이 강하게 작동할 때 공동체적 소유도 에너지전환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공동체소유 형태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스스로 이윤동기와 경쟁기체에 포획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과잉경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핵심부문의 공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공적 개입이 없이는 공동체소유 형태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거대 자본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개입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공적소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전국적 차원, 광역자치정부 차원, 기초자치정부 차원의 공적 소유관계들은 서로 보완적이다. 전국적인 차원의 공적 소유는 표준을 제시하고 광역자치정부 차원의 공적 소유는 일관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초자치정부 수준의 공적 기업은 각자의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실험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위에서 아

래로(top-down) 정책이 강요되는 관료적 형태는 타파되어야 한다.

국가의 공적 소유와 계획, 개입은 녹색전환 기금을 마련하는데서 강점을 가진다. 국가차원의 공적투자 은행을 설립하고 전환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소유의 공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은 주주의 배당금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전환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소유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보증에 의해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정부(지방행정단위와 중앙정부 모두)의 직접적인 소유와 운영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 모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정부에 의한 시장의 통제와 시민역량 제고는 역으로 시민에 의해 감시됨으로써 민주화되어야 한다.

대안적 소유형태가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시장적 소유형태들은 이윤추구의 원리가 아닌 필요충족의 원리에 따라 경제를 다시 정의하는 실천과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경제의 운용이 소수의 전문가와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는 장이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비참한 실패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금이 소유관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4. 주어진 조건

1) 팬데믹과 녹색전환

코로나19는 정부개입의 비효율성과 관료성을 강변해 온 시장맹신주의자들의 주장의 한계,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강변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시대의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주고 있다. 위기가 드러나는 계기는 우발적이지만 위기의 근원인 모순은 오랜 시간 축적된다. 하지만 위기를 통해 드러난 모순은 압도적인 권력과 동원 가능한 자원을 가진 지배계급에 의해 은폐되거나 또 다른 착취와 지배 기제를 통해 중립화된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 드러난 낡은 체계의 모순을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발적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순의 표현형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형태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 이라고 믿어 왔던 유럽의 나라들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찾아올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경제위기가 재난소득 지급과 같은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에 뿌듯해하면서 ‘대한민국’ 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우발적 계기가 드러내 줄 한국사회의 모순에 눈을 감고 또다시 낡은 기득권 질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앞에서 살펴본 경제학적 논리가 맹신하고 있는 일반균형, 한계효용이론, 그리고 균형재정에 집착과 지표로 드러나는 양적 성장이 원리적으로 경제의 목표여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충족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계기다. 경제학의 기준

을 벗어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무엇인 유토피아일까? 주관적 만족에 기초한 한계효용이론의 미시적 기초로부터 나오는 시장의 일반균형이론은 원자로 존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허구적 토대 위에 세워진 수학적 계산의 유토피아가 아닌가? 현실과 단절된, 철저히 연역적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관념일 뿐이다. 이것이 유토피아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쉬운 답을 이데올로기적 색안경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다.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경쟁은 고통을 더하는 것에도 다름 아니다. 1950-60년대, 인플레이션 억제와 균형재정보다는 일자리와 적자재정을 당연하게 여겼던 케인즈주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케인즈가 시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자였고 최종순간에서는 신고전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망해가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퍼부은 후,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균형재정을 위해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긴축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근대 시대였다면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을 일이다. 대중은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믿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부를 도둑질 당하면서 과학과 기술, 생산력과 소비에 현혹되어 계급적 본능,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들을 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몸에 각인된 통치성은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장치 안에 위치하며 그래서 물질성을 갖는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위기의 증상으로서의 사건들은 이러한 당연함을 순간적으로 흔든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현실 세계의 엇나감(정치철학자 에르네스토우 라클라우(Ernesto Laclau)가 탈구(dislocation)라고 개념화했던)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이 엇나감이 발생하는 지점이 정치(제도정치로 한정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발원하는 지점이어야 한다.²⁰⁾

기후변화는 탈구의 순간으로 위치 지어져야 한다. 바이러스처럼 시-공간적으로 압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폭발력은 작지만 위기가 체험되고 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에너지와 직결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 아주 작은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도덕적 호소와 윤리적 책임을 일깨울 수도 있다. 일하고(생산하고), 이동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모든 행위가 화석연료에 토대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에 집착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멸종의 재난을 방관하고 있다는 도덕적 무책임성이 자각되는 계기일 수 있는 것이다. 탈구가 체험되는 기후변화는 정치적 행동의 시발점일 수 있다.

모두가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삶의 질을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건어차고 있는 현실은 ‘무책임’ 과 ‘부도덕’ 을 넘어 ‘무지함’ 이라는 사실이 자각되어야 한다. 실존적 차원에서 겪는 탈구는 곧 정치로 나아가야 하며, 정치의 학습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행동하지 않고서는 의식의 성장은 있을 수 없으며, 의식의 성장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은 자기이익을 추구한다는 맹목적 목표 아래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무지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파괴는 곧 다음 세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무책임이다.

20) 탈구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서영표, “라클라우가 ‘말한 것’ 과 ‘말할 수 없는 것’ -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재해석”, 『마르크스주의연구』 13(1), 2016을 보라.

2) 에너지 공기업의 존재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녹색전환과 에너지전환은 관료적 경직성과 시장 맹신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유대와 연대를 가능하게 할 사회적 토대를 요청한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와 협동은 국가의 계획, 노동운동의 대응, 시민사회의 실천 모두를 필요로 한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때로는 서로 긴장하면서 실패와 학습의 반복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출발점은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소유형태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곧 참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적 토론 과정을 ‘낭비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70-80년대 개발주의 시대의 관행에 머물러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낡은 패러다임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급진화는 강한 노동운동과 강한 시민사회를 요청한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은 발전부문이 여전히 공적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시장의 힘이다. 신자유주의가 동유럽 사회주의의 실패라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모든 것을 시장으로 환원하는 강력한 역사적 공격을 감행한 것처럼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가 쌓아온 ‘실패의 역사’는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단순히 빈곤을 양산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와 자연 모두를 위기로 몰아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운영원리로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에너지와 물을 민영화시켰던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재공영화(remunicipalization)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실패에 대한 국지적이지만 의미 있는 저항들이었다. 비록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기업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시민운동진영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발전부문이 공적 영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녹색전환을 향한 어려운 길에서, 최소한 에너지 부문에서만은, 공적 소유로의 전환이라는 어려운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적부문의 확장은 사회주의와 동일시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이후 사회주의는 부정당하고 공격받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공격과 비판은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사고실험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페미니즘에 기반한 생태사회주의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토론되었다. 이러한 토론의 핵심은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였다.

이제 자본주의 이후를 예견하는 사회주의는 현실에 존재했던 실패한 기획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공유하고 있었던 근대적 지식패러다임의 협소함을 반성하고 있다. 합리적인 것, 또는 과학적인 것을 아주 협소하게 정의된, 경험적-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만 한정하는 지식패러다임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낡은 지식패러다임은 협소한 지식에 근거해 대다수 사람들이 삶을 통해 축적해 왔고 축적해 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무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과학기술주의에 근거한 전문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협소한 지식패러다임과 전문가주의 응축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경제학적 논리다. 경제학의 논리 앞에 민주주의는 실종된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는 숫자놀이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대형 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지만

비용-편익의 계산은 인간, 사회,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실패를 일상을 통해 경험되고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녹색전환을 위한 정세적 기회(conjunctural opportunity)를 제공하고 있다면 지식패러다임의 실패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환을 추동하고 있다. 전환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경제학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정보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기적 ‘기계’로 정의될 수 없다. 생물학적 존재로 매우 취약한 존재이기에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들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이 사피엔스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이였다. 인간은 지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진화하는 대가로 긴 유아기를 보내야 하며 거기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경쟁에 내몰려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본성에 위배됨과 동시에 인간의 원초적 불안과 공포를 강화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허문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오래된 ‘상식’을 다시 사회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이기적인 자기이익의 추구가 가져다주지 못하는 자기-중심성, 존중과 인정에 근거한 실존적 자존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된 근대적 주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의 정의를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5. 녹색전환의 주체

1)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는 탈핵과 탈석탄을 천명했다. 집권 초기 청와대는 이런 기조를 강한 어조로 밝혔다. 하지만 탈핵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정책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가 굳건히 시장맹신주의와 개발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핵과 탈석탄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탈핵노선에 자신이 없어진 정부는 형식적인 공론화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떠넘기면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회피했다. 슬그머니 탈핵은 정책 의제에서 사라졌다.²¹⁾ 탈석탄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차원에서 고려될 뿐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제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너지 전환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민주주의가 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의 계획과 개입, 다양한 에너지원의 믹스의 단계별 계획 등 매우 복잡한, 그리고 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새로운 산업으로만 간주하며 사회 전체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과제들에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전력의 시장주의적인 운영방식을 어떻게 개혁할지, 불필요한 경쟁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5개의 발전회사로의 분할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주로 천연가스발전 부분에 진출한 민간발전업자(대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 정부의 관료적인 통제와 시장원리가 왜곡되어 누더기가 된 전력거래시장 제도에 대한 개혁방안도 없다. 고작해야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기술개발 지원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은 내용이 없는 선언일 뿐이다.

21) 서영표,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 해피스토리, 2019를 참고하라.

2) (녹색)시민운동

문제인 정부의 녹색뉴딜이 녹색전환에 턱없이 부족한 변형된 ‘녹색성장전략’으로 전략한 데는 녹색 시민운동의 책임도 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장자유주의세력인 민주당과 극우 보수정당인 한국당(국민의힘)은 서로를 진보(심지어는 좌파)와 보수로 호명하면서 허구적인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실제로는 부동산개발과 토건산업을 통한 이익을 공유하면서 선거정치에서는 허구적인 진보-보수 대립을 부각시켰다. 그 결과는 비판적인 정치세력의 입지를 잠식하는 것이었다. 진보정당을 자처했던 정치세력들은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좌파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회주의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모호한 진보에 편승함으로써 그들의 ‘사이비’ 진보를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시민운동진영도 이러한 진보-보수의 허구적 대립에 편승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시민운동의 유력한 활동가들은 소위 시민사회가 선거정치 빨리 들어가는 것을 방조했다. 시민사회는 권력블록의 들러리로 전략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과거 좌파임을 자처했던 시민운동가들의 ‘전향’은 이념적 지향(목표)과 현실적 수단 사이의 혼란을 초래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녹색사회를 열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시장의 힘을 수용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를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인다. 경험이 실증하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앞에 자본주의 비판을 포기하는 지극히 경험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파국적 사실들은 관념적으로 부정한다. 한편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사회가 이미 많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윤곽이 제시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가능하게 할 이론적, 기술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이 또한 애써 외면한다.

녹색시민운동은 공적(public), 공동적(common), 사적(private)의 의미를 혼동한다. 녹색전환은 공적소유, 공동체적 소유, 사적 소유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시민운동의 핵심 활동가들은 공동체적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소유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종종 공동체적 소유를 주장하면서도 시장 기제를 옹호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관료성이 이런 주장의 주요 근거다.

이러한 발상은 전혀 새롭지 않다. 1980년대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동원했던 공적 부문 파괴의 근거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논리에 의해 파괴된 공적부문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중요한 목표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운동가들은 녹색전환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오직 재생에너지 부분의 확장만을 생각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목표와 수단 사이의 혼동과 괴리는 ‘현실적인’ 수단이 주는 달콤한 이익 앞에 목표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 시민운동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기하는 급진적 이론들과 애써 거리를 두려 한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급진적 비판이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모순의 우발적(contingent) 성격을 강조하고 사회적 과정이 불확정적(uncertain)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속류화된 마르크스주의 결정론과 환원주의를 극복하려 했

다. 사회주의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와 대화함으로써 차이와 다양성을 포괄하기 시작했고 생산력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왔다. 그런데 정작 속류화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진보를 표방했던 시민운동은 매우 경직된 태도로 자본주의 비판을 ‘현실적이지 않다,’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비난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실적인 것’은 언제나 지배 권력이 허용한 것일 뿐이다. 지배 권력과 타협하고 권력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만이 ‘현실적인 것’으로 허용된다. 이런 기준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것은 다양성과 차이를 부정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상상을 억압하는 것이다.

녹색 시민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이기 위해서는 지배 권력이 허용하는 것을 넘어 지배 권력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적대(antagonism)가 명확해져야 한다. 녹색 시민운동은 진보적 정치의 핵심인 이러한 적대의 선 굵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제 시민운동은 진보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할 뿐인 정치인들과의 파트너 관계를 만들고 그들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국가의 자원을 후원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목표달성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한다. 목표달성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예산을 책정받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강요하는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맞추어 사업을 계획한다. 시민운동가는 이런 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상담하는 컨설턴트가 되어 간다.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할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포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녹색 시민운동이 공적 부문에 남아 있는 발전부문의 해체와 시장을 통한 재생에너지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 마련되고 있는 못한 현실이 초래한 조급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성은 이율배반이다. 개혁되어야 하지만 지켜야 할 공적 발전부문을 공격하고 시장친화적인 관행을 강제하고 관료성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관료적 국가(공기업)보다는 시장이 더 낫다는 이미 현실에서 파탄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시민운동이 옹호하는 것이다.

3) (발전부문)노동조합운동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의 담지자이자 자본과 가장 날카롭게 대립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춘 세력은 노동자들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인 과국을 초래했고 경제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사회적 폐허 위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조직화된 노동계급운동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다.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은 신자유주의가 일상에 심어 놓은 경쟁과 이기적 이해관계의 의해 무력화되었다. ‘깃발’로 상징되는 조직적 행동은 낡은 과거의 유산이며 ‘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무한 경쟁에서 타자는 언제나 나를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교육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을 통해 몸에 각인되었다. 지금 당장 나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금 당장 나의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경쟁력’일 뿐이라는 관념이 팽배한 사회에서 계급, 연대, 투쟁은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자본가계급의 ‘계급정치’였다. 자본가계급과 성장하는 노동계급이 대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의 계급정치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에 기대어 만들어졌던 복

지국가의 계급적 타협을 되돌리고 그것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이루어지는 그때 정체성과 다양성의 정치가 계급정치를 대체했다. 소비주의에 의해 진작된 포스트모던한 상대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낡은 근대성으로 공격했지만 정작 자본주의는 노골적으로 그런 상대주의를 지원했다.

노동운동의 약화를 모두 조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념적 선명성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합정치의 극단을 오가면서 노동조합 정치의 일상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실 작업장의 정치는 일상의 정치와 분리되기 어렵다. 노동자는 시민이며,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생산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유통, 교환, 분배 등 자본 순환의 모든 계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드러나는 계기들이며 노동운동은 그 모든 계기의 모순이 발생시키는 적대를 정치화하는 데 앞장서야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은 정치현장과 노동현장을 나누고 정치는 진보정당에 맡기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투쟁에 스스로를 가두곤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동조합은 전투적 외양을 띤 임금투쟁과 경제투쟁에 적극적이었지만 그것은 생산과정에 국한된 투쟁이었을 뿐이었다.

조직화된 노동자의 힘은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소비와 실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은 서로 분리되어 반목하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 정치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다. 급진적 노동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은 전기, 가스, 물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 공급을 정치적 의제로 연대했어야 했다. 교육, 주택, 의료가 개인의 소득을 통해 구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 필요충족을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대의 아래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었다. 이 모든 영역은 계급 대립이 드러나고 계급정치가 전개되는 계기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조합운동은 협소한 작업장 단위의 이해관계와 현실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념적 구호 사이에서 진동했을 뿐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 신자유주의적으로 교육받았고 신자유주의적으로 행동했던 청년세대는 조직화된 노동운동을 비웃는다. 계급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대와 조직 자체를 부정한다. 한편으로 거시적 전망이나 추상적 구호에 익숙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립된 작업장 단위의 대결에만 익숙한 앞선 세대는 다음세대 노동자들에게 들려줄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 못하다.

6. 맺는말

지금까지 기후위기의 극복은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연과학자들은 인류세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으며 대멸종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 같은 사회비평가들도 자본주의 이후 단계로 나가지 않고서는 기후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파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생태적 위기는 사회전체의 ‘거대한’ 전환 없이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토론되고 해결되는 과정과 겹쳐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제기하는 페미니즘운동과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태운동, 그리고 자본주의적 계급착취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정치적 의제에 올려놓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진부한 표현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새롭게 들리는 시대다.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는 페미니즘-생태주의-노동운동-사회주의의 연대는 생산, 유통, 가치 실현, 분배의 모든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실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무대는 이 모든 쟁점이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장소일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체험되고 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은 거대한 전환을 향한 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자연과학자들의 객관적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위기의 긴급함은 이러한 불안과 좌절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역사적 성찰과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아래서는 파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논증하는 사회과학적 분석은 생태주의-페미니즘-사회주의에 근거한 사회적 투쟁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일상의 체험과 과학적 논증이 ‘멸종-저항’이라는 이름의 청년세대 투쟁과 만날 때 기후변화운동은 좌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급진적 전환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제는 우리들 대다수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파국을 목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뿌려 놓은 이기적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거나, 시장과 국가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무력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저항할 때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저항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전환의 기본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재생산을 포괄하도록 ‘생산’을 재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주류경제학을 비판하고 ‘경제’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협소한 의미의 과학성을 비판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본성을 정치적 주체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 필요한)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 존재(생물학적으로 취약한)다. 그리고 인간은 연대를 통해 합리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합리성 이면에 어두운 면을 항상 안고 있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취약하고 불안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타자와 상호의존 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실존적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 인간을 정의할 때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로 향한 이행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산의 의미와 인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후 그런 정의에 기초해서 자연과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자연적) 필요와 인간만의 독특한 인간적 필요가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되고 토론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경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필요기반 민주적 계획경제’ (needs-based democratic planning)를 추구해야 한다.